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청년정책, ‘무엇을 제공할 것인가’에서 ‘어디에 두어야 실제로 닿는가’로
 - 청년정책은 일자리·주거·복지·문화·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. 그러나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존재 여부만큼이나 생활공간에서 얼마나 쉽게 정책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정책 체감도를 좌우한다.
 - 기존 정책입지 검토는 행정동별 인구·사업체 등의 총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. 하지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청년인구·1인가구·사업체·일자리 공간분포가 서로 다르고 실제 이동은 행정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진다.
 - 이에 본 제안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의 도로망 기반 주행시간 영역을 활용하여 정책공간의 기준을 행정구역에서 실제 생활권으로 전환하였다.

[그림 1] 행정구역 중심 정책에서 ‘15분 청년생활권’으로
행정동 총량통계

“어느 동의 인구가 많은가?” ↓

SGIS 15분 생활권 분석

“이 지점에서 15분 안에 몇 명의 청년·1인가구·종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?” ↓

정책입지 결정

행정구역 중심 → 실제 생활권 중심

-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. “청년정책을 어디에 배치해야 가장 많은 정책대상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는가?”
- 즉 본 제안의 목적은 단순히 청년인구를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SGIS 공간통계를 실제 정책입지 결정과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설계에 활용하는 것이다.

□ 추진과정

- 후보지 선정부터 정책모델 설계까지 SGIS를 활용한 6단계 분석

[그림 2] SGIS 기반 정책입지 결정 6단계

① 문제정의

청년정책의 공간적 접근성 문제 설정

② 후보지 선정

A 서구청 / B 상중이동 / C 비산1동

③ 15분 생활권 생성

④ 정책대상 통계 추출

⑤ 후보지 적합도 비교

⑥ Hub-Spoke 정책모델 설계

- 활용분야 및 주요내용

- 활용분야 : SGIS 생활권역통계지도
- 분석지역 : 대구광역시 서구
- 분석연도 : 2024년
- 공간기준 : 주행시간 15분, 100m 격자 기반
- 비교지표 : 전체인구, 20~29세, 30~39세, 1인가구, 사업체, 종사자

[그림 3] 정책거점 후보 A·B·C의 공간적 특성

후보	중심점	공간적 특성	정책가설
A	서구청	행정·주거·생활서비스복합	통합정책형
B	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	산업단지·사업장 인접	일자리형
C	비산1동 행정복지센터	밀집 주거·생활권	생활밀착형

- 세 후보지에 완전히 동일한 15분 주행시간 조건을 적용하였다. 이는 행정동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책거점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추진내용

- SGIS 15분 생활권이 보여준 ‘예상과 다른 결과’

[그림 4] A·B·C SGIS 15분 주행시간 생활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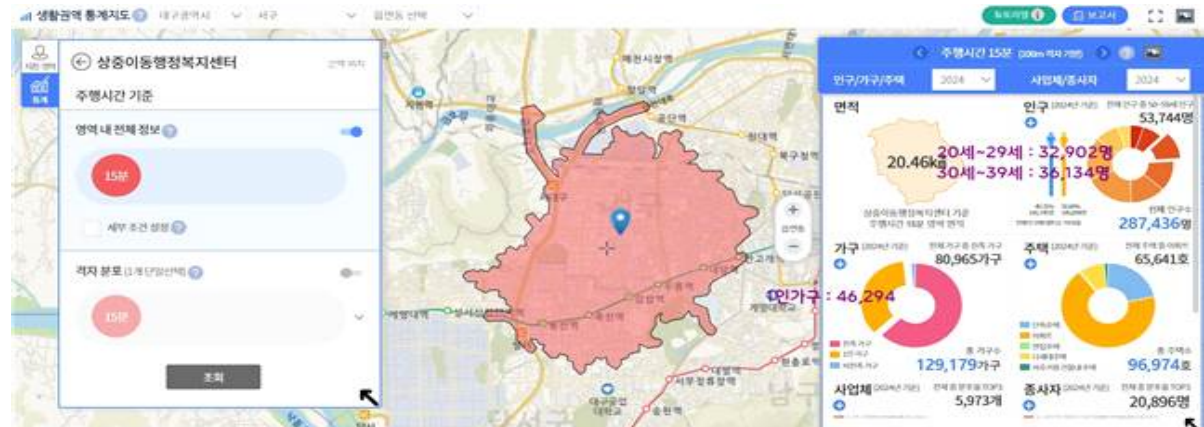
① A 서구청 SGIS 실제 캡처(별첨 이미지 참조)

23.43km² / 전체인구 283,658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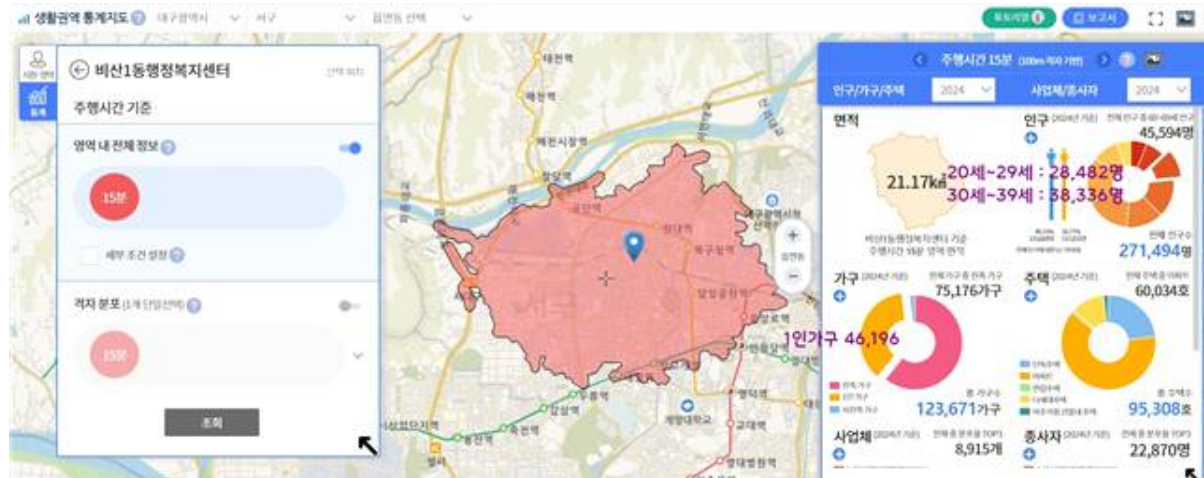
② B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 SGIS 실제 캡처(별첨 이미지 참조)

20.46km² / 전체인구 287,436명



③ C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SGIS 실제 캡처(별첨 이미지 참조)

21.17km² / 전체인구 271,494명



<표 1> SGIS 15분 생활권 정량비교

지표	A 서구청	B 상중이동	C 비산1동
면적	23.43km ²	20.46km ²	21.17km ²
전체인구	283,658	287,436	271,494
20~29세	31,440	32,902	28,482
30~39세	38,724	36,134	38,336
20~39세	70,164	69,036	66,818
20~39세 비율	24.74%	24.02%	24.61%
총가구	132,937	129,179	123,671
1인가구	52,717	46,294	46,196
1인가구 비율	39.66%	35.84%	37.35%
사업체	8,672	5,973	8,915
종사자	27,520	20,896	22,870

※ 자료 : SGIS 생활권역통계지도, 2024년 기준, 주행시간 15분, 100m 격자 기반.

※ 생활권역통계지도의 제공 연령구간에 따라 청년정책 대상의 공간적 접근성을 비교하기 위한 대리지표로 20~29세와 30~39세를 합산한 20~39세 인구를 활용하였다.

○ 발견1) 전체인구 1위가 청년정책 최적지는 아니었다.

- 전체인구는 B가 287,436명으로 1위였지만 20~39세는 A가 70,164명으로 1위였다.
- A의 전체인구는 B보다 3,778명 적지만, 오히려 20~39세는 1,128명 더 많았다.
- 전체인구 1위 B ≠ 청년 접근성 1위 A

○ 발견2) A는 1인가구 접근성에서도 가장 우수하였다.

- A의 1인가구는 52,717가구로 B보다 6,423가구, C보다 6,521가구 많았다.

○ 발견3) 사업체 수와 종사자 접근성도 달랐다.

- 사업체 수는 C가 8,915개로 1위였지만 종사자는 A가 27,520명으로 1위였다.
- 사업체수 1위 C ≠ 종사자 접근성 1위 A

○ 통계분석을 실제 정책입지 결정으로 연결

- 단순히 A·B·C의 통계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반영하여 「청년정책 거점 적합도」를 설계하였다.
- 평가기준은 20~39세 접근성 40점 + 1인가구 접근성 30점 + 종사자 접근성 30점이며 각 지표의 최고값을 만점으로 하여 상대평가하였다.

[그림 5] 청년정책 거점 적합도

※ 산식 : 지표별 점수 = (후보지 값 ÷ 해당 지표 최고값) × 배점, 종합점수 = 20~39세 접근성(40점) + 1인가구 접근성(30점) + 종사자 접근성(30점).

A 서구청 100.00

C 비산1동 89.31

B 상중이동 88.49

※ 본 적합도는 SGIS 공식지수가 아니라 SGIS에서 추출한 통계를 활용하여 본 제안에서 정책후보지 비교 목적으로 설계한 상대평가지수임.

○ 분석 결과 A 서구청 생활권이 100.00점으로 최종 1위로 나타났다.

- 중요한 점은 서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을 먼저 정하고 결론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. 동일한 분석조건으로 세 후보를 검증한 결과 A가 20~39세 · 1인가구 · 종사자 세 핵심지표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접근성을 나타냈다.

- “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점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, SGIS로 검증했더니 그 생활권이 가장 적합했다.”

○ 그러나 B와 C를 단순 탈락지역으로 보지 않았다. 각각의 공간특성을 살려 하나의 정책망으로 연결하였다

[그림 6] 「1 Hub + 2 Spokes」 청년정책 전달체계

B 상중이동 : JOB SPOKE

산업 · 일자리 특화

기업매칭 | 직무교육 | 찾아가는 취업상담 | 재직청년 지원

↘

A 서구청 : YOUTH HUB

청년정책 통합허브

일자리 × 주거 × 복지 × 창업 × 문화 × 커뮤니티

20~39세 70,164명, 1인가구 52,717가구, 종사자 27,520명

↗

C 비산1동 : LIFE · LOCAL SPOKE

생활 · 로컬경제 특화

청년커뮤니티 | 로컬창업 | 생활서비스 | 찾아가는 정책상담

- 이에 따라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일률적으로 건립하기보다 기존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A에는 통합기능을 집중하고 B·C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분산·연계형 정책전달체계를 제안한다.

□ 추진성과

- 성과1) 행정구역 통계와 실제 정책생활권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확인
 - 전체인구는 B, 사업체 수는 C가 1위였지만 청년정책의 핵심 대상인 20~39세 · 1인가구 · 종사자는 모두 A가 1위였다.
 - 이를 통해 단일 행정통계만으로 정책입지를 결정하기보다 실제 도로망과 정책대상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근거를 도출하였다.
- 성과2) SGIS 분석을 정책입지 결정까지 연결
 - 단순한 지도 시각화를 넘어 A·B·C에 동일한 15분 생활권을 적용하고 정책대상을 정량 비교하여 A 서구청 생활권을 청년정책 통합거점 1순위로 도출하였다.
- 성과3) 「1 Hub + 2 Spokes」라는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 제안
 - A (YOUTH HUB) : 종합상담 · 주거 · 복지 · 창업 · 문화
 - B (JOB SPOKE) : 산업 · 취업 · 기업연계
 - C (LIFE · LOCAL SPOKE) : 생활 · 커뮤니티 · 로컬창업

* 특히 신규 대규모 시설 건립보다 기존 공공공간을 활용한 Hub-Spoke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낮추면서 정책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.

○ 단계별 정책 적용방안

- 1단계) 실증

A를 중심으로 기존 청년·일자리·복지·주거서비스를 연계하고 B·C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

- 2단계) 평가

정책 이용자 수, 서비스 연계율, 청년정책 접근성 등을 분석하고 SGIS 생활권 결과와 비교

- 3단계) 확산

성과가 확인되면 서구 전역 및 대구광역시 타 자치구에 동일한 분석모델 적용

○ 확산가능성

- 본 제안의 핵심은 특정 시설 하나를 건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재사용 가능한 공간정책 의사결정 방법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.

후보지 선정 → 동일 생활권 생성 → 정책대상 추출 → 후보지 비교 → 적합도 평가 → Hub·Spoke 기능배치 → 운영성과 재분석

- 따라서 청년정책뿐 아니라 고령자 돌봄, 아동복지, 보건·의료, 생활SOC, 문화시설, 일자리센터 등 입지선정이 필요한 다양한 공공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다.

○ 최종성과

-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‘있는 정책’에서 실제 생활권 안에서 ‘달을 수 있는 정책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.
- SGIS는 ‘어디에 사람이 있는가’를 보여주는 지도를 넘어 ‘어디에 정책을 두어야 하는가’를 결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.
- 본 제안은 SGIS 생활권역통계지도를 이용해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 입지 결정방식을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하고, 분석 결과를 다시 「1 Hub + 2 Spokes」라는 구체적인 정책전달체계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활용 의의가 있다.